

“사고예방 효과 없어” vs “아이들 안전 우선”

민식이법 시행 3년차

작년 광주·전남서 29건 발생
법 시행 전 비교해 10건 줄어
과도규제 비판...실효성 의문



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한 시민이 도로 양쪽에 불법주정차된 차들로 좁아진 도로를 걸으며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전반기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 곳곳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정 취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해결, 보행자 전용로 등 지역 교통 상황과 도로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날 스쿨존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1대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고,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심지어 보행자 안전을 책임질 인도마저 없다보

니 등하교 시간대 아이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갈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보였다.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도로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씨(43)는

“운전할 때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좁아져 아이들이 불쑥 튀어나올까봐 불안해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을 두고 교통 문제·도로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반쪽 법안’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입법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9건(광주 20건·전남 9건)으로 집계됐다.

민식이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39건)과 비교해보면 10건 줄었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20건으로 법 시행 이후와 동등했다. 전남은 19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0건 소폭 감소했다. 특히 올해(1~5월)는 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연말까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운전자들의 법률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 또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오는 9월 첫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경찰청 등 담당 부처에 민식이법 개정 요청을 포함한 개선권고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와 현수막으로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 불감증에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에 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법률이 고쳐져야 법이 완화 되더라도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형량과 법률에 한계가 있는 형량 사이에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합당한 부분의 형량 설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에선 양형만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법률구속요건을 다양하게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노동청,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광주지방노동청은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진행됐으며, 광산구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반·하역작업 등

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와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지난달 6일 기준 광주지역 제조업 사망자수 7명, 운반·하역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명으로 28.6% 차지했다.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주로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거나 작업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관리감독자는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교육부,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17개 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

발생한 학생선수 활동 관련 피해와 목격 사례 등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학생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6만1,911명 가운데 5만4,919명(88.7%)이 참여해 0.63%가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고,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선수 237명과 가해 지도자 7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나라 기자

“하루 20만원 번다”...청년층 고액 피싱 주의

검거인원 중 30대 이하 78%

최근 광주지역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청년층을 유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56건, 피해액은 37억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의자 28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27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현금 수거책이 144명(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20대와 30대가 각각 89명, 24명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7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최근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 금액을 수거·전달·송금하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직 사이트와 SNS 등 각종 포털상에 ▲사무보조 ▲배송 ▲설문조사 등 단순 업무처럼 보이는 모집 광고글을 게재, 10만~20만원의 고수익을 미끼로 합법적인 금융업무인 것처럼 속여 채권 회수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채권회수 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와 협조해 팝업창을 통해 단순 업무를 가장한 고수익 수거책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또, 지역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처벌 사례 홍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